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종국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안하늘: PSPD, 나우누리유: 참여연대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시민·사회·노동 제 단체
(담당: 금속연맹 이창환 문화부장 : 579-4977)
제 목 포항제철의 위장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선언 및 진상조사단 보고서발표 기자회견
날 짜 1997. 10. 30. (총 3 쪽)

보 도 자 료

포항제철의 위장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선언 및 진상조사단 보고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7. 10. 31(금)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회의실

1.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를 자산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위장정리해고하여 580명의 노동자들이 십수년간 일해왔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난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2.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기계와 건물만을 인수한 자산인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등 제조기술의 노하우가 모두 이전되었고 심지어 업무지침서와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넘어갔습니다. 삼미특수강 매매대금에는 이러한 기술이전료로 1,0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모두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입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포항제철은 자산매매계약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뿐입니다. 이것은 공기업인 포항제철이 사기업보다 더 교활한 방법으로 위장정리해고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3.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200여일이 넘는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각계각층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원, 집회, 시위, 농성, 선전전등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창원에 있는 삼미특수강 앞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에 탈진한 추위와 단식으로 탈진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5. 이에 포항제철의 위장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해왔던 많은 단체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포항제철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회개혁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민주노총고용특별위원회, 전국민주금속노련, 삼미특수강노조, 민중운동탄압분쇄와민주기본권쟁취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 한국노동청년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정치연대), 민중의료연합 <이상무순>

<보도자료>

포항제철의 위장정리해고(고용승계 거부)에 맞서 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장기기증한 채 아사단식 16일째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은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회사를 부분 인수해가는 과정에서 '자산인수 방식'의 편법을 동원한 위장정리해고 조치에 맞서 10여개월이 넘게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바 있으나, 포철과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40이 넘고 평균근속년수 15년의 산업전사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고, 사회적인 비극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자식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함께 안겨주며 가정을 파탄시켜 버리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그것도 공기업이라고 하는 포철에서 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오로지 '우리가 일하던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출자 100%의 '창원특수강'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의 화살을 비껴가며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의 성실한 대화해결 노력 촉구에도 아랑곳 없이 포철의 안하무인은 극에 달한 듯 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엔 44명 단식농성장에 공민배 창원시장이 방문하였고, 10월 28일에는 김 혁규경남도지사가 역시 천막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여 가족과 조합원들에게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이란 사람과 잘 결합한 형태라야 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포철의 전근대적인 무노조 방침과 법에도 유예해놓은 정리해고등 노동자를 짓밟는 이윤위주의 기업윤리는 즉각 철폐되어야 하며 삼미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남단에 있는 창원에서는 44명의 단식노동자들이 결사항전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투쟁이라 할지라도 포철의 부당한 위장정리해고에 맞서 우리 자신들을 죽여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참다운 발전을 위하고 민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또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진심을 대변하기 위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힘있게 투쟁할 것입니다. 한편 단식투쟁과 함께 시작된 눈물겨운 가족들의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내자식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포철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것과 당장 대화의 여지가 없다면 채용약속한 1978명에 대해 약속을 지켜 200여명에 대해 조건없이 우선채용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고용승계의 논란은 법적으로 다투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라 하더라도 모두 죽이는 방향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포함한 회사 구성원을 죽이는 일부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1997년 10월 31일

민주노총 금속연맹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포항제철의 위장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공 동 선 언

기 자 회 전

일 시 : 97년 10월 31일 (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참여연대 사무실

□ 순 서

-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 단식상황 보고
- ◆ 공동선언문 발표
- ◆ 질의 응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회개혁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영동포산업선교회,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민주노총고용특별위원회, 전국민주금속노련, 삼미특수강노조, 민중운동탄압분쇄와민주기본권쟁취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 한국노동청년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정치연대), 민중의료연합<이상무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미특수강 위장정리해고 진상조사보고서

1. 진상조사단의 구성 및 조사개요

가. 진상조사단의 구성

- * 공동위원장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김중배 대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 실무담당 박원순 변호사(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
- * 조사위원 한명희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국장)
이홍재 교수(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원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주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1997. 9. 18 ~ 10, 1

2) 조사기관 및 면담자

-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손경호
근로기준과장 노민기
- * 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장 임채민
- * 창원지방세무소 법인세과장 심상희
- * 창원특수강(주) 상무 황준호
인사부장 추교원
- * 삼미특수강(주) 사장 이봉규
상무 양희성
- *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위원장 김창남

진상조사
김중배

2. 진상조사 결과

가. 사안의 진행 개요

- * 1997. 2. 14. 포철은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를 설립하고,
 - 2. 17. 삼미특수강(주) 봉강부문 및 강관부문을 인수하되, 계약형식은 “자산매매계약” 방식으로 체결함, 총 매각금액 7,194억원,
 - 2. 25. 포철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에서 직무조사용 정원표를 삼미특수강(주)로 제시하면서 삼미특수강(주) 봉강 및 강관부문 노동자 총 2,342명 중 1978명을 채용하겠다고 구두합의함.
 - 3.26 - 3.29 까지 신규입사 방식으로 1,762명의 삼미특수강(주) 봉강 및 강관부문 노동자 채용함, 이 과정에서 580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함.(애초 채용하기로 구두합의한 인원보다도 216명이 적은 숫자임)

* 1997. 3.- 1997.9. 7개월간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진행함.

* 1997. 8.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당함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임)

* 1997. 6. 포철의 삼미특수강 위장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1997. 9. 8. - 삼미특수강 위장정리해고 진상조사단 구성. 활동중

* 1997. 10. 16.부터 44명의 조합원들이 창원특수강(주) 정문앞에서 텐트를 치고 집단단식에 돌입함(현재 단식 16일째임)

나. 양 당사자 주장 요지

1) 삼미특수강 노조 등의 주장요지

이건 계약은 표면상 형식은 “자산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실제로 삼미특수강(주) 봉강부문과 강관부문의 사업전체가 통째로 넘어간 셈이다. 따라서 노동자들도 포괄고용승계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창원특수강(주)에서 근무 중인 삼미특수강(주) 출신 노동자들의 경우 삼미특수강(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창원특수강(포철)측의 주장 요지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 그 근거로는 첫째, 근로자 승계 없기로 명문계약 맺었다. 다만 특약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에 불과하고 둘째, 인사노무관리와 생산체제 새로 구축하였으며 셋째, 채권.채무 인수하지 않았고 넷째, 영업부문과

판매유통망이나 유통조직 인수않고 새로 구축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삼미특수창측에서 주장하는 1,978명의 구두채용 약속건은 1,978명의 범위내에서 필요인원을 채용하겠다는 뜻이었다.

다.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

관계 당사자들과의 면담과 제출된 관계자료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건 계약은 표면상으로는 “자산매매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포괄적 “영업양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현재 창원특수강(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삼미특수강(주)로부터 넘겨진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즉, 인사·기획파트 인원 49명이 포철로부터 이적되어온 점과 수천억원의 투자자금이 투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미특수강(주)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자산매매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만 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도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및 매매물건의 운영과 관련된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 지침서에 대한 대가로 창원특수강(주)가 기술이전료 1,000억원을 지불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양도받았음이 계약서상으로도 확인된다.

다) 인사노무관리체제와 생산체제를 새로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와 다르다.

즉, 나중에는 내부조직을 개편하였지만, 인수할 당시 인원채용시에는 삼미특수강(주)의 기존 부서조직 체계에 따라 채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체제나 생산체제를 사실상 인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라)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7,194억원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660억원만 삼특에 직접 건네졌고 나머지 금액은 삼특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이나 포철에 지급된 사실이 삼미특수강(주) 경영진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창원특수강(주)측이 삼미특수강(주)의 일부 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포철에 외상대금으로 창원특수강(주)측이 직접 변제한 641억원 부분은 채무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셈이다.

마) 영업부문을 새로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 창원특수강 영업파트 인력 전체 60명 중 47명(78.3%)이 삼특출신이고 나머지 13명이 포철 등에서 이적한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는바 실제 영업의 일선담당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영업부문을 새로 구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퇴직금등 정산 문제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삼미특수강(주)측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등을 정산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후 창원특수강(주)측이 중도금을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계약서 기재내용과 반대로 퇴직금등이 정산되지 않았는데도 창원특수강(주) 측이 삼미특수강(주)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퇴직금 등은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실은 이건 거래가 계약서 문안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은 계약서 문안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창원지방 세무서측의 견해

창원지방세무서 측은 이건 거래를 “자산매매계약의 형식을 빌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결과는 포괄적 양수도가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즉 이건 거래를 포괄적 영업양수로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사안의 의미

이번 사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기업주들은 “정리해고”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모든 기업주들이 계약서를 자산매매 계약으로 작성하면 쉽게 인원정리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지난 겨울 노동법 재개정시 기업의 인수, 합병에 의한 정리해고 조항이 삭제되고 또한 일반 정리해고도 2년간 적용유예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하겠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상식적으로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이 확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공기업인 포항제철측이 다른 사기업의 모범이 되는 길을 택하는 대신 도리어 앞장서서 국민의 주요구성부분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기업의 사명과 관련하여 유감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포항제철과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1997. 10. 31

삼미특수강 위장정리해고 진상조사단

공동위원장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김중배 대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실무담당 박원순 변호사(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사위원 한명희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국장)

이홍재 교수(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원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장)

정주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 소장)

포항제철의 위장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공 동 선 언

대통령선거 열기가 시절을 모르고 한창인 가운데 우리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도산하고 중소기업이 결판이 나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진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노동자들입니다.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은행융자금의 빚더미와 아이들 학비가 총칼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너무도 힘겨운 일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부도유예협약도 없고 화의도 없고 경제부총리의 대책도 없습니다. 가족수당도 없고 무료병원도 없습니다.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불신과 증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공공선의 약속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할 권리를 빼앗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포항제철은 지난 2월 17일, 창원특수강이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는 부도 위기를 맞고 있던 삼미특수강의 강봉, 강관부문에 있던 모든 기계장치와 설비,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과의 고용관계만은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자산매매계약이라는 형식을 가장해서 기업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을 피해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 위장계약서 때문에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수년간 청춘을 바쳐 우리나라를 철강대국으로 일으켜 온 2,342명의 노동자들 중 포항제철의 우격다짐에 밀려 1,762명만이 수습사원의 자격으로 창원특수강에 선별 채용되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58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포항제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계와 건물을 사들인 것이지 고용관계를 포함한 영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미특수강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철의 행위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노동법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사법원리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으로부터 사들인 것은 기계와 건물만이 아닙니다. 각종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넘어갔고 제조기술의 노하우가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업무지침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매뉴얼까지 고스란히 포철의 것이 되었습니다. 삼미특수강의 관리자들도 “단추만 누르면 공장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가 삼미특수강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에는 기술이전료 1,0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양도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구나 총매매대금의 10%도 안되는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삼미특수강의 매매대금 거의 전부가 포항제철에 지고 있던 외상대금과 은행부채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돈은 삼미특수강에 전해진 적도 없었고 포철이 서류상으로 스스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포항제철은 자산매매계약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이 벽에 부딪치자 국가경제적인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주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국가경제는 어떤 국민을 위한 것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가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해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임금과 휴식을 포기하고 총파업을 감행했고 여기에 온 국민이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적인 발단은 날치기 통과된 법률이 정리해고를 허용했

기 때문이었고,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노동법 재개정을 통해 정리해고제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하였고, 기업의 인수·합병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바로 잡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포항제철의 행위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리해고를 탈법적이고 기만적인 자산매매계약 방식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으로서 국회의 노동법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조세와 부담으로 성장한 공기업인 포항제철이 사기업보다도 더 지독하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가정과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고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장정리해고는 바로 가정불안으로 이어지고 각 가정의 불안은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철의 이와 같은 행위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 모든 사기업들이 포항제철식의 위장정리해고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탈법적이고 위장된 정리해고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탄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커녕 온 국민의 생활과 가치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업이 전체 국가경제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윤을 독식하거나 몇몇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 건강하고 강력한 국민경제는 국민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복돋우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의 인수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위장정리해고 행태는 질서파괴자의 전형이며,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포항제철은 위장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자들과 국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포항제철은 자산매매계약이라는 위장계약방식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영업인수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포항제철은 부당한 방법으로 위장정리해고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성실히 승계하고 그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부는 공기업의 운영과 경영상의 지도책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국회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1997. 10. 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회개혁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민주노총고용특별위원회, 전국민주금속노련, 삼미특수강노조, 민중운동탄압분쇄와민주기본권쟁취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 한국노동청년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정치연대), 민중의료연합<이상무순>

정제강의 실체사건연대

25개 단체

심상정 사무국장

송철호 지로위원장